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janggrae2015@gmail.com 트위터 @hopelabor

<취재요청>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9287명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12.22(화) 09:30 국회 정론관

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을 두고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고 18일에는 재벌들을 만나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20일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말 국민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2. 올해 3월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만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응답한 것은 ‘박근혜 노동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3.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박근혜 노동법의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박근혜 노동법을 찬성했을까요?
4.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12월 22일(화) 아침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합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중 어느 게 더 신뢰할 수 있는지 기사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남신(010-6254-2768) 대변인 박점규(010-9664-9957). 끝.

2015. 12. 21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다 -

긴급하게 진행된 닷새 동안의 설문조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합쳐 9,287명이 대거 참여했다. 그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관련 내용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 조사와 대비된다. 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 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 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 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 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 12.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janggrae2015@gmail.com 트위터 @hopelabor

문서번호: 장그래 15-12-1

시행일자: 2015. 12. 22

수 신: 방송사 대표

참 조: 시사프로그램 제작진

제 목: 노동5법 관련 긴급 토론회 요청 건

1. 민주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귀 방송 제작진께 인사를 드립니다.
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380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지난 3월부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올들의 국민투표, 노동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희망버스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3.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법안 개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시급히 5대 노동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노동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1만여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7%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 이에 귀 방송 제작진께 5대 노동법안에 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청자들이 찬성과 반대의 양쪽 목소리를 직접 듣고 5대 노동법안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5대 노동법안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하겠습니다.

※ 주제 방식(토론, 대담 등) 토론자 등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 담당 : 김혜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장(010-4538-0051), 박점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대변인 (010-9664-9957), 윤지영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부팀장(010-4568-6171). 끝.

2015. 12. 21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요약>

-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조사기간 : 2015. 12. 14.~ 18.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 오프라인 : 비정규직노조 설문지 배포 수거(1366명)
 - 온라인 : 온라인 설문양식(구글 독스)을 이용하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및 360개 산하 단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참여(7921명)
- 응답자 : 총 9,287명
- 조사 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의식조사

○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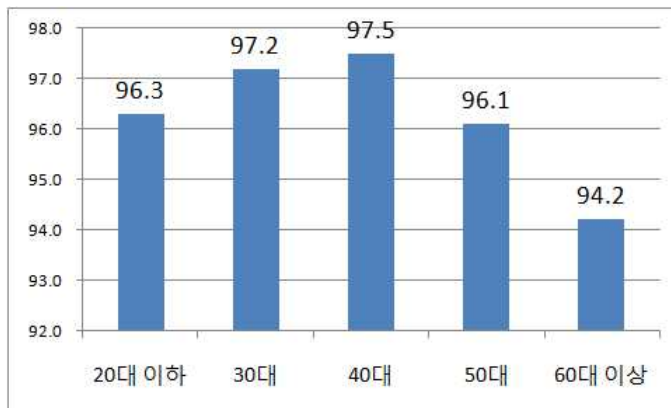
-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97.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절대다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빈도(명)	비율(%)
찬성	281	3.0
반대	8,970	97.0
합계	9,251	100.0

-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간 연장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노조원 97.1%, 비노조원 96.3%로 별 차이가 없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노조원	빈도(명)	235	7,744	7,979
	비율(%)	2.9	97.1	100.0
비노조원	빈도(명)	40	1,054	1,094
	비율(%)	3.7	96.3	100.0
전체	빈도(명)	275	8,798	9,073
	비율(%)	3.0	97.0	10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97.2%), 40대(97.5%)가 상대적으로 반대비율이 높은 편이고, 60대 이상(94.2%)이 낮은 편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에 구분없이 95.5 ~ 97.5%의 높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정규직	빈도	119	4,644	4,763
	비율	2.5	97.5	100.0
무기계약직	빈도	57	1,847	1,904
	비율	3.0	97.0	10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55	1,164	1,219
	비율	4.5	95.5	100.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40	1,272	1,312
	비율	3.0	97.0	100.0
전체	빈도	271	8,927	9,198
	비율	2.9	97.1	100.0

○ 1번 문항에서 “반대”를 선택한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았다.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법 개정 방향	빈도	비율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7,002	76.0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1,114	12.1
현재 적당	1,096	11.9
합계	9,212	100.0

- 기간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노조원과 비노조원으로 구분해서 파악해보면, 기간제한 방식 폐지 후 사유제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조원(75.2%) 보다 비노조원(78.7%)에서 더 높게 나왔다. 노조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볼 때, 노동자들이 현재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동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노조원	75.2	12.3	12.5	100.0
비노조원	78.7	11.9	9.4	100.0
전체	75.6	12.3	12.1	100.0

-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79.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의 기간제법이 55세 이상 중고령자에게는 무제한의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당사자인 60대 이상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20대 이하	74.1	13.1	12.9	100.0
30대	74.2	14.2	11.6	100.0
40대	76.8	11.7	11.5	100.0
50대	76.8	10.8	12.4	100.0
60대 이상	79.2	5.9	14.9	100.0
전체	76.1	12.1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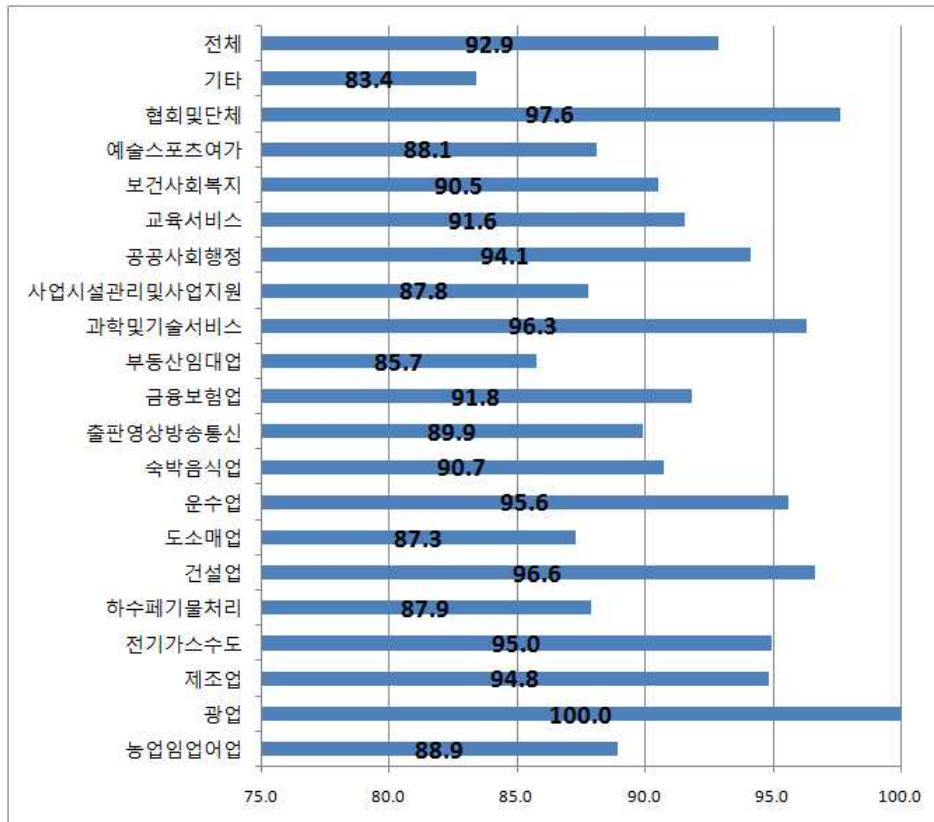
2.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식 조사

-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 대상 확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92.9%는 파견 확대가 아니라 파견 대상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파견확대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노동자는 3.2%에 불과하다.

파견법 개정 방향	빈도(명)	비율(%)
규제 강화 및 금지	8,586	92.9
현재가 적절	363	3.9
파견대상 확대	298	3.2
합계	9,247	100.0

- 파견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건설업(96.6%), 제조업(94.8%), 과학및기술서비스업(96.3%), 운수업(95.6%)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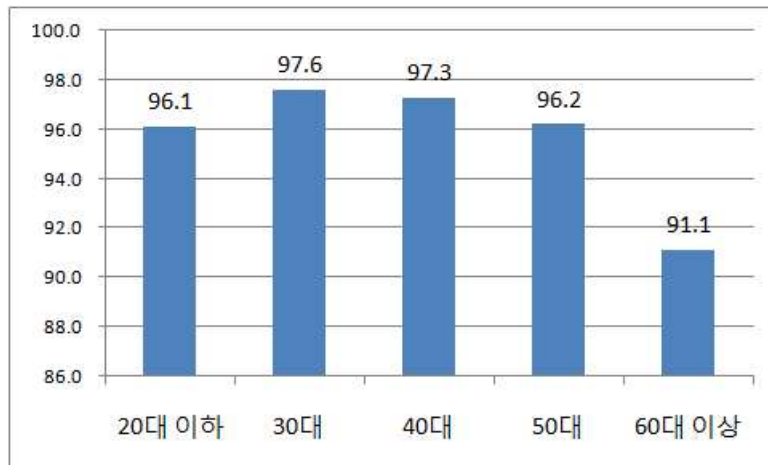


○ 파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확대 추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이었다. 파견 확대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견확대 효과	빈도	비율
고용 불안 심화	8,965	96.9
일자리 증가	173	1.9
별 영향 없음	114	1.2
합계	9,252	100.0

- 파견 확대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을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97.6%의 응답을 보였고, 40대가 97.3%로 그 뒤를 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91 ~ 93%의 고르게 나왔다.

구분		규제 강화 및 금지	현재가 적절	파견대상 확대	전체
정규직	빈도	4,446	175	126	4,747
	비율	93.7	3.7	2.7	100.0
무기계약직	빈도	1,732	99	73	1,904
	비율	91.0	5.2	3.8	100.0
직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1,156	33	48	1,237
	비율	93.5	2.7	3.9	100.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빈도	1,206	51	46	1,303
	비율	92.6	3.9	3.5	100.0
전체	빈도	8,540	358	293	9,191
	비율	92.9	3.9	3.2	100.0

■ 첨부 :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관련 설문지

○ 인적 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만 ()세
3.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직 ③ 직접고용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④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4. 노동조합 가입	① 조합원 ② 비조합원		
5. 업종	① 농업/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및 영상/방송통신 ⑪ 금융 및 보험 ⑫ 부동산 및 임대 ⑬ 과학 및 기술서비스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⑮ 공공/사회행정 및 국방 ⑯ 교육서비스 ⑰ 보건 및 사회복지 ⑱ 예술/스포츠 및 여가 ⑲ 협회 및 단체 ⑳ 기타()		

○ 기간제법 개정 관련 질문

1. 기간제법은 임시직, 계약직의 남용을 막고자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 기간제신분이라는 하지만 계약을 연장해서 2년을 더 일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반대 : 2년을 추가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고용불안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 <1번 문항>에서 “반대” 를 선택한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간제 사용기간 규정을 폐지한 후 합리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체
 ②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1년으로 축소
 ③ 현재대로 사용기간 2년이 적당

○ 파견법 개정 관련 질문

1. 파견노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다른 간접적인 인력활
용 방식입니다. 이러한 간접적 인력 활용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파견법에서는
32개 업무(197개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
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불안정한 고용인 파견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
- ② 현재 수준의 파견허용이 적절하다.
- ③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파견 대상 업무를 더 확대해야 한다.

2. 파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되어 고용불안 심화
- ② 파견 허용 업종 확대로 일자리 증가
- ③ 별 영향 없을 것